석간, 외신보도 동향
'16.1.27.(수)

내일신문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4면 산업

포스코, 이란 제철소 건설사업 참여

민관 이란시장 공략 박차
130여명 경제사절단 파견

포스코가 16억달러(약 1조9200억원) 규모의 대형 이란 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10년 만에 재개되는 한-이란 장관급 경제공동위를 2월29일 이란에서 개최하며 130여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파견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열고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현지 민관 진출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란 현지 PKP사가 차바하르경제자유구역에 건설하는 16억달러 규모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8% 가량 참여할 계획이다. 제철 공법은 포스코가 개발한 파이넥스(압축연속주조압연설비) 방식이 토대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PKP 등과 연산 16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CEM 일관제철소 건설 1단계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오는 3월 지분구조와 투자규모 등이 포함된 합의각서(MOA)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 착공 목표 시점은 내년이며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9년부터는 냉연 연산 60만t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공동위 개최에 맞춰 무역진흥·인프라 건설·항만개발 협력 등 총 15건의 MOU를 체결한다. 80여개 업체·기관(1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현지에서 수주 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테헤란 의과대학 종합병원 건립 등 이란 의료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총 70억달러(약 8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기본협정 체결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월 중순에는 석유·가스 분야 민관합동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해 해상시추설비 공급,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일종) 수입 확대 등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이날 우 차관은 지난해 비관세장벽 사례를 모은 '2015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내일신문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4면 산업



한-중 FTA 발효 기념식 우태희(왼쪽에서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402호실에서 열린 '한중 FTA 발효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우 차관을 비롯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한루이샹 한국중국상회 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한-중 정부인사 및 기업인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1면 종합

‘1000만 서명 운동’ 오프라인 6만 돌파

온라인도 24만5000명 넘어

경제계가 주관하고 있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 운동’의 오프라인 서명자 수가 서명 1주일(공휴일 제외) 만에 6만 명을 넘어섰다.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 중 1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중복 서명’ 논란이 됐던 온라인 서명과는 달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부스를 찾아 직접 서명한다는 점에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사그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1000만 명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작된 오프라인 서명자 수가 서명 시작 1주일 만인 26일 현재 6만833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단체와 각종 경제 관련 협회 등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114개 단체만의 서명자 수를 집계한 것이다. 오프라인 서명자 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동본부 측은 그동안 관제 서명운동 논란을 우려해 오프라인 서명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서명 시작 1주일 만에 오프라인 서명자가 6만 명을 돌파한 속도를 고려하면 다음 주 중으로 10만 명 돌파도 무난할 전망이다. 온라인 서명자도 이날 오전 9시 현재 24만5000명을 넘어서 온·오프라인 서명자는 모두 30만 명을 돌파했다.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자가 4만 명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전경련·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 경제단체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서도 2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서명했다. 전국 단위에서 길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9000명가량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은 곳이 많아 오프라인 서명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음 주 중으로는 1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되고, 취합이 안 된 곳을 고려하면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

▶관련기사 2면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2면 종합

오프라인 서명 내주 10만명 돌파할 듯

‘1000만 서명 운동’ 확산

“자기이익만 따지는 정치인들 답답해서 거리로 나와 동참”

▶관련기사 1면

“정치인들이 경제살리기보다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송용섭 씨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수영 책임간사는 “온라인 서명을 안내해줬는데도 굳이 오프라인으로 서명하고 싶다며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관제·중복 서명’ 논란에도 불구, 1000만 서명운동의 오프라인 서명자가 1주일(공휴일 제외) 만에 6만 명을 넘어서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0만 명 서명을 받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던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서명운동’(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다.



26일 강원 춘천시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시민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서명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자발적 오프라인 서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제 서명운동’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0만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난 18일 이후 경제단체나 협회 등이 속속 참여하면서 오프라인 서명자도 크게 늘고 있다. 26일 현재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경제단체나 협회는 모두 114개(주요 경제단체 9개, 시민단체 등 29개, 경제 관련 협회·단체 76개)에 달한다.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 18일 전국적으로 8000여 명에 불과했던 오프라인 서명자 수는 이후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의 가두 서명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추세라면 다음 주중으로는 오프라인 서명자 1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온라인 서명자도 이날 오전 9시 현재 24만5000명을 넘어서, 온·오프라인 서명자가 이미 30만 명을 돌파했다. 시민단체 등까지 합치면 40만 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져 SK그룹과 KCC가 서명운동에 동참한 데 이어 한진그룹도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사옥에서 지창훈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KT&G도 이번 주중 사내에 서명부스를 설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환·윤정선 기자 hwan91@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9면 기획

한노총 빠졌지만… 노사정위 지속 가동

노동개혁특위 전체회의 열려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노사정위는 학계·전문가 중심으로 9·15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위섭)는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특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우선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교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노사정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는 없지만, 향후 한국노총이 복귀할 때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문가·공익 그룹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9·15 노사정 대타협 의제 중에서 청년·비정규직 대표 참여 등 노사정위 기능과 역할 강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업종별위원회 운영 방안을 포함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과제와 최저임금제도·저소득근로자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근로계약 개선방안 등 후속 과제도 다룰 예정이다. 논의 결과물은 노동계가 복귀해 특위가 정상화되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첫 회의는 2월 중순 개최된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정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사측 인사, 어수봉 한국교육기술대 교수 등 공익위원,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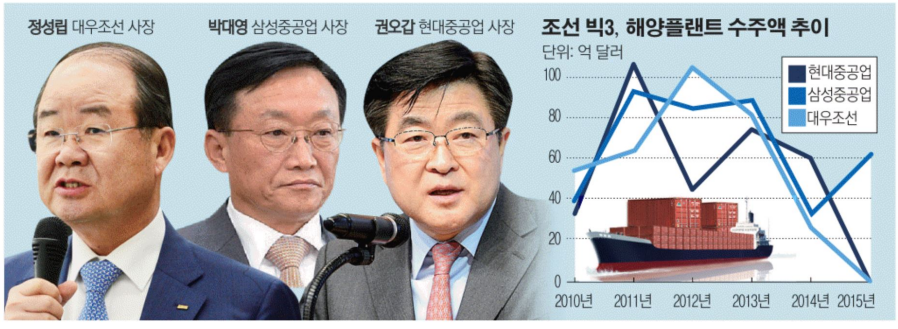
김영주 기자

조선업계 부활 신호탄?… 해양플랜트 리스크 '현재진행형'

'조선 빅3' 지난해 4분기 실적개선 전망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해양플랜트 물량을 상당부분을 털어내 소폭이나마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발주처의 계약 취소 위험과 인도 지연 등 각사별로 처한 상황으로 의미 있는 흑자 달성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유가 장기화 등 악재 수두룩
해양플랜트 추가 부실 위험도
올해 수주목표 20%가량 낮춰
"올 3분기 이후에야 업황 회복"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나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표면적으로 적자 행진을 멈추고 흑자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대우조선은 적자 늪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프엔가이드는 대우조선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014년 같은 기간(4조5440억원)보다 24.17% 줄어든 3조4456억원, 영업이익은 7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 빅3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7조9319억원에 달했다.

소폭이나마 흑자 달성 기대감이 높아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실적개선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수년 전부터 이어진 업황 침체와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로 인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주 급감과 발주 취소 등의 여파도 맞물리고 있다.

조선 빅3는 지난해 해양플랜트 부실을 실적에 대거 반영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은 남아 있다. 해양플랜트 리스크에서 탈출하는 길은 예약된 인도 시기에 맞춰 물량을 털어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저유가로 인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해양플랜트 발주처들이 잇따라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인도 시기 역시 늦추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조선 빅3에는 과거 수주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십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작년 해양플랜트로 큰 손실을 봤지만 이미 수주한 물량이 발주처로 인도될 때까지 추가 부실위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은 총 24기로 이 중 올해 인도 예정인 물량은 4기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내년과 오는 2018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22기로 이 중 올해 인도가 예정된 물량은 9기다.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은 22기다. 그러나 드릴십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없어 조선 빅3 가운데 해양플랜트 리스크가 가장 적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선사 매출 가운데 50%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유가가 계속 하락하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오일메이저들이 해양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 하락세는 조선 빅3의 실적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 빅3는 저유가에 따른 발주 감소로 아직까지 새해 마수걸이 수주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이 단 1건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이후 빅3는 두 달 가까이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조선 빅3는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20%가량 낮춰 잡았다. 일각에서는 저유가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와 함께 선박 수주 침체, 실적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올해 3분기 쯤에야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재천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이후 해양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LNG를 중심으로 한 선박 수주와 유가가 회복돼야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우 기자 acw@

이투데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2면 종합

실적전망 들여다보니

현대重·삼성重 흑자전환 기대… 대우조선도 적자폭 줄어들 듯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흑자전환과 함께 영업손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조선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도 4분기에 300억~500억원의 흑자전환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4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는 아니지만 조 단위였던 적자폭을 줄이면서 이전과 같은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부진을 타개할 대체재로 여겨졌던 해양플랜트에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던 조선 3사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선업이 어느 정도 회생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해양플랜트 손실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며 누적 적자가 4조3782억원에 달했다. 삼성중공업은 작년 3분기까지 1조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했다.

다만 4분기 실적으로는 아직 업황 회복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8분기 만의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4분기 흑자폭이 조선·해양사업부가 아닌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작년 부실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는 점에서 흑자전환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고 적자를 기록한다 해도 적자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아시아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0면 산업

늪에 빠진 電車, 공격투자로 탈출 노린다

〈전기·자동차〉

삼성·LG전자 등 전자업계, 4분기 실적 급감 … 현대기아차도 시장 기대치에 못미쳐, 상반기 과감한 투자로 하반기 실적 반전 움직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전차군단(전기·자동차)이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 들어 성적이 급감했다. 현대기아차도 4분기 실적에 발목이 잡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전망도 녹록지 않다. 전자와 자동차 업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깜짝 실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반기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격차를 벌인 뒤 하반기 실적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15년 매출 8조3420억원, 영업이익 6258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에 가깝다. LG디스플레이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3% 가까이 줄어든 606억원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00조3400억원, 영업이익 26조3700억원을 기록해 4년 연속 매출 200조원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4분기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기대치에 다소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매출 1조1923억원, 영업이익 987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적자, TV 사업 역시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도 못미쳤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18조7980억원, 영업이익 5조3361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내려서며 8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달성에 실패했다.

국내 기업들의 이같은 실적 악화는 신흥국의 통화 약세와 주요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결과다. 올해도 업황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전차군단은 공격 경영으로 위기 타개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력 제품의 가격 하락을 이겨내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평택에 최대 15조원의 대규모 반도체 라인 투자를 진행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사용자 생체 정보를 전송하는 바이오프로세서 조기 양산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선다. 스마트폰 시장에선 '갤럭시 S7'을 조기 출시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고 TV 시장에선 초고화질(SUHD) TV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 생활가전에서는 상식을 파괴하는 혁신 제품인 '무풍 에어컨', '정온 냉장고'를 글로벌 시장에 조기 안착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D램 가격 급락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한 '6조원+a'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년 연속 최대 투자인 것이다. 신규 라인과 함께 SK하이닉스가 뒤쳐진 10나노급 미세공정, 3D 낸드플래시 양산을 앞당길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소폭의 흑자전환을 기록한 자동차부품(VC) 사업부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진용을 꾸렸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올레드(OLED) TV를 생산하고 있는 LG전자가 초고화질(UHD) TV와 함께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해 TV 시장 부진을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LCD 패널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수익이 떨어지자 대형 OLED 패널 라인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기존 LCD 패널로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운 만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경쟁 구도를 옮겨 가겠다는 의도다.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를 별도의 브랜드로 구축해 고급 자동차 시장을 공략한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던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 높은 브랜드에서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포석이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6종의 제네시스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츠, BMW 등 독일차와의 정면 승부에 나서는 셈이다. 이를 위해 벤틀리의 수석디자이너를 지낸 벨기에 태생의 루크 동커볼케도 영입했다. 동커볼케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대디자인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피터 슈라이어 기아차 사장과 함께 제네시스와 현대차 브랜드의 디자인 개발을 맡는다.

명진규 기자 aeon@

헤럴드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1면 종합

성장절벽 스마트폰 치킨게임 제물이 되나



애플, 판매 최저증가율 적신호

삼성·LG전자도 정체국면

추격업체는 적자늪서 허우적

팔수록 손해에도 출혈경쟁 가속

스마트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마니아들의 절대적인 신봉 속에 승승장구하던 애플조차 몸을 낮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 중국 후발 주자들도 '팔 수록 손해'라는 내상을 입고 있다.

글로벌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익 감소, 그 외 업체들은 '영업적자의 늪'에서 허우덕대며 본격적인 출혈 경쟁에 나섰다. 이른바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27일 애플은 실적 발표를 통해 암울한 2016년의 시작을 예고했다. 애플은 지난 분기 아이폰 7480만대를 판매,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2007년 첫 모델 발매후 사상 최저 판매 증가율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이 지난해 759억 달러에서 최고 260억달러가 줄어든 500억 달러 선에 머물 것이라는 자체 진단이다. ▶관련기사 13면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CFO는 "중국, 특히 홍콩시장의 약화를 지켜보고 있다. 경제환경이 현재 이상적이지 않다"며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에서도 (매출)성장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던 몇 달전의 발언과는 180도 달라진 뉘앙스다.

아이폰6S를 필두로 한 아이폰 라인업 전체적인 판매부진과 생산축소, 또 상반기 선보일 애플워치 신제품의 발주 물량 감소도 같은 맥락이다. 분기 20조원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줬던 '마니아층 공략을 통한 폭리'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3년만에 다시 중저가 라인업 출시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 나올 4인치 아이폰 예상 가격이 5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애플의 전략 실패"를 점치게 만든다.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제품이 범람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구도에서 한 세대 지난 제품을 두 배 비싸게 파는 것은 애플에게도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아이폰의 올해 전체 예상 판매량은, 4인치 중저가 모델을 포함해도 올해보다 4%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스마트폰 '한파'는 안드로이드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오는 28일 실적을 발표할 삼성전자의 4분기 예상 판매량은 8100만대 수준이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이미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다. 지난 26일 실적을 공개한 LG전자도 마찬가지다. 판매량은 전분기와 비슷한 1500만대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V10 등 고가 신제품의 힘으로 영업손실 폭을 크게 줄인 것이 위안이다.

스마트폰 시장에 한파를 몰고온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 업체들의 속사정은 더 안좋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며 글로벌 3위까지 치고오른 화웨이나, 가격 파괴의 진앙지인 샤오미 모두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오포 같은 로컬 브랜드의 연내 파산설, 업계 구조조정 설까지 공공연하게 떠도는 실정이다.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의 코차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기본 기능의 일반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몇몇 신흥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고급형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 스마트폰 범주 내에서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제 살 깎아먹는 치킨 게임의 본격적인 개막을 예고했다. 과거 500달러에 팔리던 제품이, 이제 300달러로 스스로 가격을 낮추며, 경쟁사가 먼저 퇴출되기만을 기다리는 '치킨 게임'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마침에 막을 올렸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3면 MARKET & COMPANY

삼성전자 "성장절벽 돌파한다" R&D 17조 투자 IT기업중 1위

삼성전자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에 141억 달러를 투자, R&D 투자규모로는 세계 2위, IT(정보기술) 기업중 1위를 차지했다.

27일 폰아레나가 글로벌컨설팅 업체 PwC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해 141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를 R&D에 투자했다. 이는 153억 달러를 투자한 폴크스바겐에 이어 세계2위다. 전체 IT기업 중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R&D 투자액이 104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5.8%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6.4%, 지난해에는 7.1%로 늘었다. 특히 매출대비 투자 비중은 1위를 차지한 폴크스바겐(5.6%)보다도 많았다.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이처럼 R&D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미래 먹거리 발굴'를 꼽았다. 매체는 "삼성전자의 주수익원은 스마트폰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반도체, TV등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최근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중국 제품이 저가공세를 펼치면서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지난 해 1월~9월 전세계에서 팔린 스마트기기는 총 13억8000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5.6% 늘었지만 상위 15개 제조사 중 9곳이 중국업체였다. 이들 9개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총 4억1000만대로 점유율이 30%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판매량이 2억6600만대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전년동기대비 판매량이 4% 감소했다.

이런 시장 변화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기존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R&D 투자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애플 역시 지난 해 60억 달러 가량을 R&D에 투자해 처음으로 20위 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애플카와 같은 새로운 미래 신사업에 투자해 아이폰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4년 연속 R&D 투자 1위를 차지했으며, IT기업 중에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中 작년 TBT·위생 등 규제 141건
베트남 통관 복잡…철강수출 애로

지난해 말 한-중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15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2013년 11개국 101건에서 2014년 12개국 113건, 지난해 12개국 14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 관련 장벽으로, 주로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 기술적 규제를 의미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TBT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과 서비스·투자가 각각 20건, 수출·수입규제 17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30건으로 최다였다. 베트남의 경우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교역이 늘고 진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비관세장벽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자의적으로 품목을 분류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관세 부당징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현지시장 유통을 위해선 강제인증제도(CCC)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인증을 받는 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유출 우려마저 감내해야 한다. 서비스 투자에 있어선 외국기업이 정보통신(IT)산업 투자 진출이 제한돼 우리 기업의 독자 진입은 불가능하다.

베트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베트남 정부가 산업용 전구물질 등의 수입을 제한해 철강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상 2차례의 허가를 얻어야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복잡하고 낙후된 통관절차와 부정부패도 걸림돌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한중 FTA 비관세 조치 현지작업반을 2월 중으로 개최하고 3월에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신설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내일신문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4면 산업

저유가로 LNG발전 가동률 뚝↓

이용률 2013년 1월 80.1%에서 2015년 12월 40.6%로 급락 … 중유발전이 대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가동률이 현저히 줄고 있다. 대신 연료단가가 비싸 거의 가동하지 않던 유류(중유)발전소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최근 몇 개월 사이 급락하면서 LNG발전과 유류발전의 급전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저유가 지속 현상은 원자력 → 유연탄 → LNG → 유류발전 순으로 고착화됐던 급전순위를 바꾸었다.

급전순위는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소 가동지시를 내리는 순서다.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원가와 효율 등을 감안해 매월 순위를 부여받는다.

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LNG발전 이용률(가동률)은 2013년 1월만 해도 80.1%에 달했으나 그해 12월 74.5%, 2014년 12월 60.5%, 2015년 12월 40.6%로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비해 유류 발전 이용률은 같은 기간 35.8%, 32.4%, 20.9%에서 55.8%로 급등했다.

LNG발전 이용률은 2013년만 해도 유류발전보다 두배 이상 높았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이용률이 낮아졌다. LNG발전과 유류발전의 가동 역전 현상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급전순위에 따라 원자력, 유연탄 발전기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전력예비율이 오르면서 LNG발전기의 가동 기회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유류발전소와 LNG발전소의 이용률이 뒤바뀐 것은 저유가로 유류발전소의 연료단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류발전 열량 단가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Gcal당 5만7295원으로, LNG발전 5만6620원보다 비쌌다. 하지만 11월부터 상황이 바뀌어 3개월 연속 유류발전의 단가가 더 저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유류발전 열량 단가는 4만7176원으로, LNG발전 5만3311원보다 6135원 싼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유류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반면 천연가스는 4~5개월 후에야 가격이 반영된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에는 유류와 LNG발전의 열량단가가 역전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유가가 지속되더라도 유가가 안정화되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발전기를 많이 보유한 민간발전회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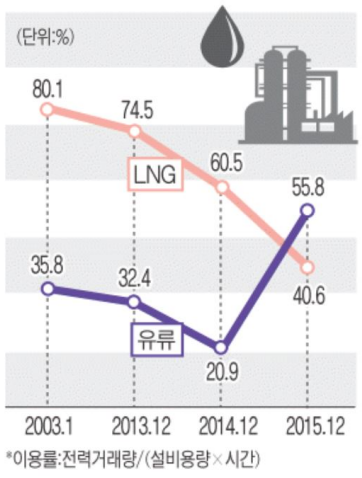
민간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두달간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전력예비율이 워낙 높아 가동기회가 줄어든 데다, 저유가로 중유발전소에도 밀리다보니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 원가절감, 효율향상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며 "용량요금(CP)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전사에 지원하는 CP는 올해 들어 소폭 인상했지만 RCF(지역별 용량가격계수) 산정 기준에 따라 실질 지원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사들이 CP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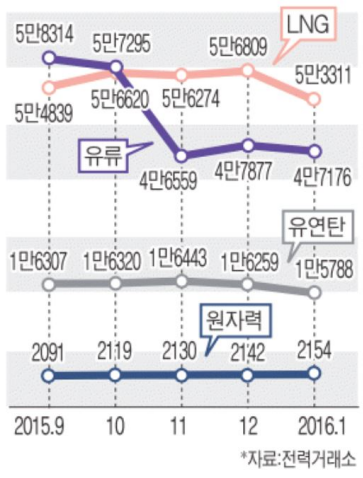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유류 및 LNG 발전기 이용률



*이용률:전력거래량/(설비용량×시간)

연료별 열량단가 추이 (단위:MW/원)



*자료:전력거래소

내일신문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1면 금융

자율주행차 관련주 "갈길 멀다"

상용화 앞서 기술·법률 등 준비 안돼
"안일한 대응으로는 경쟁력 상실"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관련 분석을 내놓거나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게 당장 장미빛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 시작, "관련 수혜주 찾아라" = 자율주행차는 일반자동차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보안,센서·항법 기술등을 융복합해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자동차는 15년 신형 제네시스(EQ900)에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했고, 2020년에는 더 고도화 된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MW의 경우 무인 원격주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볼보의 경우 약 100여대의 자율주행차량을 실험 운행중이다.

상용화가 멀지 않은 듯한 최근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와 함께 증권업계 또한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주인공이었다"며 관련주들을 앞다퉈 소개하고있다.

KTB투자증권 연구원들도 "자율주행차 기술특허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완성차업체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업체간 전략적 제휴 또한 강화되고 있다"며 "완성차업체들이 2025년 전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천명하고 경쟁적으로 안전·편의성능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만큼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핵심부품·센서개발 시급 … 상용화 아직 멀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KEIT)은 이달 초 발간한 '유럽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로드맵 분석'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미래 키워드에 대해 분위기에 편승한 성급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자동차 생산대수 5대 강국이라는 착시효과로 인해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럽 스마트 시스템 플랫폼(EPoSS)와 유럽도로교통연구자문위원회(ERTRAC)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을 총 6단계로 나누고 있고, 레벨 0,1,2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일반 주행조건에서 완벽한 수준인 레벨3 이상의 시스템이 상용화된 적은 없다고 분석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핵심부품과 센서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확실한 기술선도 기업,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IT 관계자는 "각종 언론매체와 기업들의 경쟁적인 발표로 인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다"며 "선진업체의 경우 브랜드 홍보효과 등을 이유로 상용화 출시기기를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단순 연구·데모 수준을 상용화로 표현하는 기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돼야 … 한국은 걸음마 단계 =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초안을 발표, 앞으로 마련해야 할 법령의 기준을 제시했다. 법령 초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반드시 수동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상용화되더라도 개인이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제조업체에서 리스를 해야 사용할 수있도록 해 자율주행시스템의 검증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자율주행관련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법률 및 제도 정비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과 보험상품을 개발, 이를 통해 고속도로 주행 시 사망률을 50% 이상 낮추겠다고 나섰으나 법률로서 정착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연구원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고책임의 귀속문제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기술의 '해킹'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다"면서 "한국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은 물론 법·제도 정비,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 주도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1월 6일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6 기아자동차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주율주행 영상 체험을 통해 관련 선행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는 '뉴 기아 아이(NEW KIA x i)'를 체험해보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20면 종합

印·부탄에 '차세대 전력망' 공급
에너지 新산업 '100조 시장' 육성

한전 새 성장동력 확보 총력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에너지가 강조되는 미래 신 기후체제 변화를 겪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에너지 신산업 100조 원 시장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기존의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공급·운영 사업 중심에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회 확산에도 공사의 몫을 다할 계획이다. 한전은 연초 이후 해외 에너지 신산업 관련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제무대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서겠다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부탄 전력청(BPC)과 2560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의 '지능형 변전소 EPC' 계약을 체결했다. 지능형 변전소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기를 차단하고 연결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차세대 변전소를 말한다. 한전은 이를 설계, 조달, 시공까지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한국형 변전소와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인도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에도 진출했다. 지난 13일 인도와 협약을 맺고 인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인도의 전력 손실률은 26%에 달할 정도로 송배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크다. 한전은 선진 원격검침 기술을 이용해 송배전 효율을 올리고 ESS를 통해 발전소 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소비로 이어지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2025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한전은 연초에 에너지 신사업 조직을 강화했다. 스마트그리드&ESS 사업처를 '에너지 신사업단'으로 승격하고 조직 인원도 60명에서 15%가량 증원했다. 기존 전기차·ESS·신재생에너지원·AMI(원격검침인프라) 등 사업을 현장에 최적화시킨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수출 상품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에서 두각을 보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3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3월까지 두바이 수전력청 본사에 있는 업무 및 차량정비 건물인 '그린 거라지(green garage)'에 태양광 ESS 통합운영 시스템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한전형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으로 구축하는 내용이다.



조환익(가운데) 한전 사장이 지난해 7월 제주시 연삼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본점 개소식에 참석, 충전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한전 제공

에너지 생산·소비 새 시장 창출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달성

구리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UAE와 300만달러 사업 계약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선도
2017년까지 3660기 설치 완료



한전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한전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을 한전 구리지사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설치된 SG스테이션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1650명, 해외 30개국 473명이 방문 견학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은 건물 내 전력, 가스, 물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냉난방 운영설비, 태양광, ESS, EV 충전소 및 스마트기기 등과 융합해 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은 지난해 '국제스마트그리드 대회(ISGAN)'에서 세계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우수상을 수상해 기술성과 독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73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 중이며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에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2009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개발했으며, 충전소 시설기준 제정, 전기차 충전 전용 전기요금제도 신설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사업자와 함께 SPC를 설립해 전기차 유료 충전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오는 2017년까지 3660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월 나주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72개 한전 사업소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전국 단위 전기차 충전 '스타-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올해는 250기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해 장거리 운전에 따른 전기차 방전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두바이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참여는 한전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 국제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캐나다 마이크로그리드 수출, 미국 메릴랜드주 에너지 신산업 협약 체결에 이은 중동지역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출로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20면 종합

"친환경 전력 공급 최우선"

발전 3사 신임사장 취임


김용진


정창길


윤종근

김용진 한국동서발전과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각각 취임식을 진행했다.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도 오는 2월 2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울산광역시 동서발전 본사 취임식에서 김 사장은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낡은 발전소를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하고 창의적 사고로 에너지 신산업에도 역량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6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30여 년간 공공혁신, 예산, 인사, 재정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공직자다. 공공정책과 혁신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발전업계나 산업부가 아닌 타 부처(기획재정부) 출신의 첫 발전사 사장이 됐다.

중부발전의 정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중부발전 관리본부장, 사장직무대행 등을 거쳐 그동안 민간기업 고문으로 일해왔다. 그는 기본 중시, 성장 추구, 열린 경영을 경영 방침으로 삼았으며 '한마음으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중부가족'을 표어로 내세웠다.

일정상 취임식을 2월로 미룬 윤 사장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본부장, 삼성물산 플랜트본부 고문 등을 거쳐 그동안 서부발전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발전 3사는 지난해 12월 사장 공모를 거쳐 지난 20일 나란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신임 사장으로 확정됐다.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20면 종합

"미니클러스터 통해 기술개발 신규 시장 진출 다각적 지원"

강남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통해 재래식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바꿔 신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26일 강남훈(사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전통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 클라우드를 적용해 산단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 산단 구축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단공은 올해 혁신 산단 구축사업을 전국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창원·부평·대불·여수 등 4개 혁신지원센터에 혁신시설을 집적화해 입주기업 업종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단 입주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도모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현재 70여 개의 미니 클러스터도 100개 수준으로 늘린다. 미니 클러스터는 산단공이 주도해 만든 산학연협의체다.

강 이사장은 "미니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 국방 관련 기술, 스마트 카 등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공이 담당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마지막 공터인 옛 정수장 부지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산단공은 옛 정수장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2500억~3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강 이사장은 "민간사업자,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아시아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13면 유통

산단공 "단지 내 소프트파워 키울 것"

정부·지자체·입주기업 초청 신년인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26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입주기업 등 120여명을 초청해 산업단지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단공은 산업단지가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미래관점에서의 투자와 대응을 통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 발전 비전·전략 마련과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람·기술·기업·문화가 모이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산업단지를 재창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 확대가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기업의 창의·혁신 역량을 높이고, 수출기업 육성과 입주기업 일괄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단지가 산업화의 주역에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산업단지에는 현재 7만2000여개사가 입주했고, 국내 제조업 고용의 52%, 생산의 50%,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

내일신문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2면 정치

박 대통령 이란 방문 검토

북핵 대응·경제협력 포석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만에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이란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역할을 주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에 방문,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이란 방문 검토 소식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문 시기나 추진 배경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은 확정되면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4면 국제

朴, 상반기 이란 방문… 經協논의-北核환기

구체일정은 아직 확정 안돼
'이제 남은 것은 북한뿐'
국제사회에 일종의 시그널

韓기업 진출 지원도 협의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핵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을 전격 방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경제'와 '북핵'의 이중 포석을 안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이란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들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다. 정 대변인은 방문 시기와 관련해 "추가적인 것은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지난해 7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제재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추진됐다. 청와대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은 교착상태인 북핵 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무기 개발단계인 이란과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한 북한과는 핵 개발 프로그램의 진척 정도가 다르지만 국제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자체는 국제사회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북한뿐'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주의 환기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 및 지원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이란을 찾아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교역 규모를 향후 10년 안에 6000억 달러(약 720조 원)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오는 6~7월쯤 이란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인구가 8000만 명으로 중동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제재로 묶여 있던 자금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대거 풀리면서 연간 6~8%대의 고도성장이 예상된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아시아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6면 종합

朴, 한국 대통령 첫 이란방문 검토

시장선점·北압박 등 효과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방문 시기나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것은 확정되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지난해 7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경제 재건에 착수한 이란은 풍부한 석유자원과 인구, 관광 자원을 보유한 중동의 대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주요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올 상반기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성사되면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핵 포기 후 경제재건에 적극 나서는 이란의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헤럴드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01면 종합

깨어난 이란…朴대통령이 간다

靑 "성사땐 한국 정상으론 첫 방문"

이르면 4월…침체경제 돌파구 마련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로 서방 정상들의 이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사진> 대통령도 이란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방문 시기나 추진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것은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 되며 국내 기업의 이란 신시장 개척 및 수출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란 시장을 선점하려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각축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이란을 찾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4년 기준 520억달러(약 62조원)인 양국 교역 규모를 10년 안에 6000억달러(약 720조원)로 11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올 상반기 이란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원유 매장량 4위, 인구 8000만명의 자원부국이자 인구대국인 이란은 국제사회의 봉쇄 해제 이후 이처럼 중동 최대의 내수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로 이란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류에 대한 현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재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를 차지하려면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이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란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로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방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4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검토는 지난해 7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 수순에 들어가면서부터 물밑에서 준비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는 14년 만에 이란을 찾았고 6월에는 외교차관, 8월에는 국토장관과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했다. 다음달 말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해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를 갖는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27면 오피니언

2.6% 성장률에서도 희망의 끈은 존재한다

지난해 성장률 2.6%를 두고 말이 많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다. 곧 나라가 망할 것같은 분위기다. 그동안의 해법은 잘 못된 것이란 지적이 대부분이다. 투자를 촉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살길이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아니다. 관련 법이 국회에 막히고, 노동계가 파업으로 막는데야 해결할 도리가 없다.

숫자만 들여다보면 답이 없다. 점점 더 기운만 빠질 뿐이다. 새로 일어설 힘조차 없어진다. 이쯤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다. 언제 우리가 편했던 적 있었나. 쉽게 된 것 있었나. 우린 사람 빼고 변변한 자원 하나 없다. 손바닥만한 국토는 그나마 분단된 상태다. 정부 예산의 10% 가까운 돈이 국방비에 투입된다. 그런데도 이만큼 잘 살고 있다. 어떻게든 헤쳐 나왔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무책임하고 막연한 낙관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로만 보지 말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2.6%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정도면 우리 경제 규모로 보아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다. 7~8%에서 6%대로 내려앉아 호들갑인 중국만이 비교 대상일 수는 없다. 그렇게 잘 나간다지만 미국과 영국의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는 2.4%다. 잘 될 때 얘기다. 4분기가 좋지 않아 벌써 그 이하를 점치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독일은 지난해 1.7% 성장했다. 그게 4년만에 최고다. 프랑스는 성장률 1%대를 회복했다고 안도한다. 하지만 4·4분기가 0.2%에 불과하다.

우리의 2.6%는 온갖 세계 무역환경의 악재들을 딛고 만들어진 것이다. 메르스라는 경제폭탄도 맞은 가운데 나온 수치다. 게다가 파당 싸움하느라 경제엔 도통 무관심한 국회를 등에 지고 만든 수치다. 혹자는 그나마 부동산 경기와 재정확대를 통한 단기부양책으로 만들어진 성장률이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단기부양책이 이토록 통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전세값 오르니 빚내서 차라리 집을 사라는 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국민들이 또 있을까. 불과 1년만에 가계빚 폭탄이라며 대출 길을 막아버려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정부를 믿고 호응한다는 얘기다.

저유가와 중국 경기하락 때문에 올해 경기가 더 어렵게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저유가는 호재였던 시절이 더 많다. 중국 불안은 어차피 맞아야 할 예방주사다. 제대로 대처하면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답을 내라고 만들어진다.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39면 오피니언

與野, 저성장 걱정되면 원샷法 처리 약속부터 지키라

한국경제의 위기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국회는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이고, 정치권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실제로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지난해 성장률이 2.6%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제 버팀목인 전자·자동차·철강 등 핵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내리막길로 돌아서고 순익(純益)도 급감했으며, 정년 연장과 노동개혁 지연으로 고용 한파(寒波)가 몰아친다는 경제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여야(與野)는 최근 1000만 명 서명운동 등 여론에 밀려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었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수많은 법안 중의 2개일 뿐이지만, 그래도 국민은 이를 계기로 국회가 변화할지 모른다며 주시해왔다. 그런데 이제 이런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릴 태세다. '소수 야당 결제법'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제도적 한계에다 야당의 사사건건 연계전략, 여당의 협상력 부재와 청와대의 불통이 겹친 결과다. 4·13 총선이 27일로 7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다. 지역구를 7석 늘려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을 뿐이다.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커 26일 열기로 했던 '3+3 회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모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미 합의한 두 법안에다 선거구 획정을 연계하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왔다.

정치 놀음에 경제와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더민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저성장을 걱정하면서 "구조개혁을 돕고 경제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말이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도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38면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산업혁신立法 7년 수난史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활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 법의 기구한 사연을 지켜봤던 기자로서 남다른 감회가 일었다. 그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는 많았지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첫 제도다. 게다가 모든 걸 멈추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던 '대기업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기활법은 국회 법안 제출 시점으로 따지면 7개월 만에 마지막 문턱에 다다른 것이지만, 첫 논의 시점을 놓고 보면 '7년의 수난사'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경제 부처 간에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모델로 삼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때도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현안으로 부상했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이 진행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2010년에는 특별법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당시의 법안명은 '산업혁신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었는데, 그 법안은 국회 문전에도 닿지 못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셌다. 정부는 '대기업 특혜법'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특별법안을 서류철에 처박고 말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경제계에선 선제적인 사업 재편 필요성과 이를 지원·촉진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마침내 정부도 이를 공식 과제로 내걸었다. 나날이 추락하는 수출이 직접적인 동인이 됐다. 지난해 7월 초 국회에 상정된 기활법은 예상대로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유는 딱 하나,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게 전부였다. 급기야 대기업 악용 우려를 불식할 '4중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 재편 목적이 아닌 경영권 승계 목적일 경우를 가려내는 장치다.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 경영권 승계 목적일 경우 승인 거부, 사후 승인 취소, 특혜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보태졌다.

법안의 수정과 야당 내부의 주도권 경쟁도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야당의 기류를 바꾼 '1등 공신'은 경제계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이었다. 정치적 논란이 일자, 참여 기업과 단체들을 늘려가며 "우리의 진정성을 폄훼하지 말라"고 맞선 게 주효했다.

기활법은 산업계를 수렁에서 구해줄 슈퍼맨이 결코 아니다. 법의 유효기간이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원안에서 후퇴한 조항도 많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도 험난해 보인다. 벌써 일부에선 "차 떼고 포 떼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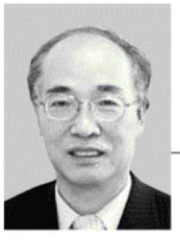
하지만 설령 그 법의 효과가 줄었다고 해도, 그게 만능이 아니라고 해도, 지난 7년간 사업 재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경제계의 '절규'가 받아들여진 의미는 퇴색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 편이 되라는 게 아니다. 공정성과 형평,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마치 대역 죄인으로 몰듯이 대기업 특혜라는 낙인만 찍으면 모든 게 통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다. 이제 곧 선거철이다. 공약들이 나올 텐데, 이번엔 제발 '대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주기를 기대한다.

oshun@munhwa.com

문화일보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37면 오피니언

對이란 교역 확대 위한 스마트 전략



기고

장병옥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로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 이란이 그동안 경제 제재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매장량 세계 4위인 원유, 2위인 천연가스 등 자원에 대한 생산과 수출길이 열리게 되고, 동결된 해외 자산이 풀리면서 세계 각국은 이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재 해제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 테헤란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란과 중국의 양국 교역 규모를 10년 안에 60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일본도 중국에 이어 이란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이란을 방문해 이르면 다음 달 투자협정 서명으로 인프라 투자의 발판을 만들고 경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럽 역시 경제 제재 이후의 진출에 대비해 발빠르게 조치를 해왔다. 경제 제재 해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지난해부터 이미 경제 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로하니 대통령이 25일부터 유럽을 방문해 이탈리아 기업들과 약 22조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고 프랑스와는 에어버스 114대 도입 계약으로 이어졌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역사는 짧지 않다. 또한, 한국의 대이란 시장점유율은 2011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국방수권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앞설 정도로 이란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그러나 경제 제재를 이유로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한 사이 그 틈새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놓치게 됐다.

경제 제재가 해제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이란 시장 진출에 미온적이고 한발 늦은 조치만을 내놓을 뿐이다. 물론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테헤란을 공식 방문해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로하니 대통령을 예방했다. 외교장관의 14년 만의 이란 방문은 한국-이란 경제 협력의 증진과 북핵 대화 진전을 위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월 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해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는 정상급이 나서는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이란 시장 진출 의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응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란 시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0조 원의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한 전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외 수출 부진에 빠진 한국의 경제 국익을 위해 바로 지난해의 중동 순방 때와 같이 국가의 수장을 비롯한 전방위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도 이제 대이란 수출시장을 뚫기 위한 스마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제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부·외교·민간 외교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민관 합동 외교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

끝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폭발 직전이었던 이란 국민의 불만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정부가 핵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아시아경제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27면 VIEW

대중소기업의 공생과 '선제적 복지'



뷰&비전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에 342만여개 사업체가 있다. 99.9%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0.1%인 3130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2013년 4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의 부가가치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0%다. 5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국내총생산의 55.2%다. 대기업이 경제의 중심이다. 중소기업은 절대다수일 뿐이다.

대기업을 우리 몸에 비유하면 심장이다. 심장의 무게는 250~350g이다. 몸무게 70kg인 사람의 심장의 비중은 커봐야 200분의 1이다. 0.5%도 안 된다. 이런 심장이 멎으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멈추는 꼴이다. 대기업이 기침하면 한국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이유다.

심장과 혈관은 공생관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만약 중소기업이 없었다면, 만약 대기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서로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피를 생산하고 심장과 이를 운반하는 혈관처럼 말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만들었다. 대기업은 부품으로 최종재를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았다.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는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듯 우리 몸 곳곳에 전달됐다. 대기업의 이익은 납품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분배됐다. 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수효과라 한다. 대기업이 흥하면 중소기업도 흥하는 구조다.

마지막 이득은 대기업이 챙긴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장사를 하는 소상인은 모두 대기업의 고객이다. 대기업이 만든 자동차와 휴대전화, 전자제품을 구매한다. 심장이 만든 피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다시 대기업에 돌아간다. 이러한 소득분배는 낙수효과보다 경제순환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요즘 동맥경화가 생겼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이다. 재벌 경영에 2세, 3세의 등장이 잦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경영권을 물려받는다. 경영능력은 매출과 관련이 있다. 매출을 올리려면 사업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빵도 굽고 커피도 끓여야 한다. 아버지 세대의 '창업보국' 정신은 이미 사라졌다.

뭐라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시장진입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품질을 높인다.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춘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 대부분 소상인은 사업을 접는다. 고령화 여파로 생계형 창업이 느는데도 말이다. 장사하지 못하면 대부분 빈곤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다. 자연스레 복지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실업수당을 주고 기술 훈련과 일자리를 소개한다. 이를 흔히 '생산적 복지'라 한다.

그러나 우리 몸이 그러하듯 역할의 균형이 깨지면 아프게 마련이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장은 멈춘다. 대기업은 결국 소비자를 잃는 꼴이다.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병원비는 실업수당이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대기업, 중소기업, 국민, 정부 모두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비용 측면에서 소상인 보호보다 실업수당 지급이 더 낫다. 소상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와 가계로서 그 역할이 있다. 소상인은 이윤창출형보다 생계유지형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경제순환은 깨진다. 시장과 정부가 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선제적 복지'가 필요하다. '생산적 복지'보다 '선제적 복지'가 더 효과적이다. 실업자가 된 후 겪게 되는 정신적 박탈감과 상대적 소외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생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길 기대한다.

내일신문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23면 오피니언

경제시평

4차 산업혁명, 축복인가 재앙인가?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MBA

'기술 융합'의 시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포하며 선제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3번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류 삶의 질을 드높여주고, 인류사회에 윤택한 경제적 풍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폐막된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정한 올해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는가?'라는 논문을 쓴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의 설명처럼 18세기 이후 인류는 증기기관과 철도를 필두로 한 제1차 산업혁명, 전기 내연기관 배수시설과 주택 내 수세식 화장실, 통신 시설, 엔터테인먼트, 화학, 석유를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혁명, 컴퓨터 웹 휴대전화 반도체산업을 핵심으로 한 제3차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은 디지털 및 바이오산업, 제조업이 서로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단언컨대 3차원(3D)프린터, 인공지능 로봇(AI), 사물인터넷(IoT)은 인간을 번거로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며, 나노·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의학의 발전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문명의 개척은 여전히 불황의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노동은 대부분 로봇으로 대체될듯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옥스퍼드 대학교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발표한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보고서는 임금, 학력, 컴퓨터·자동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추어 단순노무직으로부터 전문직에 이르는 700여 개의 다양한 직업 중 47% 가량이 20년 안에 로봇으로 대체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잃는 속도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단순노무직, 여성, 노동 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군에 있어서도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사무행정직, 제조업생산직, 광산채굴직 등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아직 확고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사회적 부를 갖추지도 못한 청년층들은 기성세대와의 경쟁은 물론 로봇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 설자리를 잃게 된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함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기술적 우위 및 지적재산권(IP)보호로 대변되는 제도적 보호막을 방패삼아 자국 내 로봇을 통한 생산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격차를 더 많이 벌일 것이다.

일자리 경쟁 더 치열해져

결국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극한의 창의력을 갖춘 소수의 인재들, 그리고 그들이 일구어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일부 선진국들에게는 축복이, 이제는 추격의 발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진 대다수의 인류와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한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났듯 이제는 시대적 운명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다.

社說

애플까지…성장엔진 멈춘 스마트폰

스마트폰 9년 진격의 종말인가. 애플이 오늘 발표한 2016회계연도 1분기(한국 기준 지난해 4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치는 이 같은 물음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1분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지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다음 분기 매출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마트폰 시대를 연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기업 애플의 침체는 시장포화로 아이폰 성장세가 꺾인 데다 혁신제품을 내놓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업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애플의 1분기 매출은 759억달러(91조1000억원), 순이익은 184억달러(22조1000억원)로 시장 전망치를 조금 밑돌았으나 선방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는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순이익 잠정치 6조1000억원을 압도하는 뛰어난 실적이다. 문제는 증가율 둔화다.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7%와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이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 정체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애플제국의 황금어장으로 성장견인차 역할을 해온 '아이폰'의 부진이 꼽힌다.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증가한 7468만대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증가율은 2007년 첫 모델 발매 이후 가장 낮았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아이폰 고객들이 최신기기에도 구매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피로증후군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애플의 더 큰 문제는 2분기(2016년 1~3월)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이다. 애플은 2분기 매출이 500억~5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최대 13.8%,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34% 이상 감소한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2분기 이후 13년 만의 감소폭이다. 1분기를 고비로 애플의 폭풍 성장세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 확실해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애플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아이폰 같은 파괴력 있는 제품을 다시 내놓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는 애플뿐 아니라 삼성과 LG 등 IT 기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애플의 부진한 실적은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혁신제품을 부단히 내놓지 않는다면 IT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지속성장과 생존이 결코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할 삼성전자의 성과와 전략이 궁금하다.

Foreign Media Monitor

1.25 (월) 외신대변인실, 구내 4562

MOTIE

Today's Picks (오늘의 추천 기사)

- 한국 창업 기업들을 해외로 연결하는 두 가지 플랫폼 (Tech.Co) : *투자유치과* 국문번역
- New Nuclear Reactors Are Being Built a Lot More Like Cars (Quartz) : *원전산업정책과* 영문요약

Top Headlines (톱 뉴스 헤드라인)

o 무역/투자

- **제주도 경제 성장, 한국 전체보다 훨씬 높아 : *투자유치과***

  This Korean Holiday Island Puts the Rest of the Country's Economy to Shame (Bloomberg)

  Far from the Hyundai car factories and Samsung chip plants in South Korea's industrial heartland, a holiday island's economy is growing at more than double the national rate.

- **2016년 세계경제, 미국 주도의 경제 대침체 겪을 수 – 래리 서미스 전 미국 재무장관 경고 : *수출입과***

  Significant Downturn for Global Economy in 2016: Economist (SABC)

  One of America's top economists has warned that a significant downturn in the world economy, led by the United States, could be a defining story of 2016.

o 산업/IT

-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현대와 합작 조선소 건립 추진 : *조선해양플랜트과***

  Saudi Aramco Studying Shipyard Deal with Hyundai (Reuters)

  The MoU was signed with National Shipping Co. of Saudi Arabia, as well as a subsidiary of Lamprell, a United Arab Emirates-based engineering firm, and South Korea's Hyundai Heavy Industries.

- **중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삼성, LG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 타격 : *전자부품과***

  Korean Batteries Makers Slump As China Suspends EV Subsidies Barron's Asia)

  This new policy measure will have a bigger impact on Samsung SDI and LG Chem's earnings. Nomura Securities has the numbers:

- **애플 아이폰,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 *전자기과***

  Apple's IPhone Growth Era Comes to an End (FT)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said sales for its quarter to March would fall to between $50bn-$53bn, due to growing volatility in some economies, including China, as well as the currency and financial markets.

o 에너지/자원

- **한국, 납·아연 세계 최대 수입국 등극 : *자원개발전략과***

  This Asian Country Just Became The World's Biggest Lead And Zinc Buyer (Oil Price)

  That's Korea. Korea Zinc will this week inaugurate a massive new build-out of processing capacity for these metals.

- **UAE, 첫 원전 가동 예정대로 준비 중 : *원전수출진흥과***

  UAE Prepares to Start up First Nuclear Plant (InterFax)

  The construction of Abu Dhabi's nuclear power facility appears to be on schedule, but unresolved issues surrounding its operation remain.

o 통상

- **한-중-일 제9차 FTA 수석대표협상 진전 없이 끝나 :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China-Japan-S Korea FTA Talks Fail To Progress (Tax-News)

  The parties discussed market access for goods and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s and investment, but there has been no breakthrough in these areas.

- **아프리카, 이제 철도가 아닌 스마트폰이 변화 이끌어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Smart Africa: Smartphones Pave Way for Huge Opportunities (FT)

  What the railway was to Victorian England, the mobile networks are to Africa.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1. 한국 창업 기업들을 해외로 연결하는 두 가지 플랫폼 (Tech.Co)

Membersheep and OpenTrade Aim to Highlight Korea's Startup Ecosystem

- 2년 전 포츈(Fortune) 지에 실린 "창업자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Why Startups Fail, According to their Founders)"라는 기사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42%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답했음. **그러나 한국 스타트업은 그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음. 한류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는 많지만, 한국 밖에서 이를 구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음**

-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스타트업 기업 투자를 촉구. 그러나 한국에 기반을 둔 **비키(Viki: 동영상에 다국어 자막 번역을 넣어 제공하는 서비스), 미미박스(MEMEBOX: 미용용품 온라인 판매 서비스), 에그번(Eggbun: 외국어학습 어플리케이션)** 등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 스타트업이 외국 시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 다른 한국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외국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임. 한국 드라마나 화장품의 인기가 커지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정도는 덜하지만 서구 국가에서도 한국 문화를 원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두 회사가 있음. **바로 한국제품을 외국 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멤버쉽(Membersheep)과 스타트업 투자를 연결하는 오픈트레이드(OpenTrade)임.** 이 두 회사는 다른 스타트업을 도우면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 옴

멤버쉽(Membersh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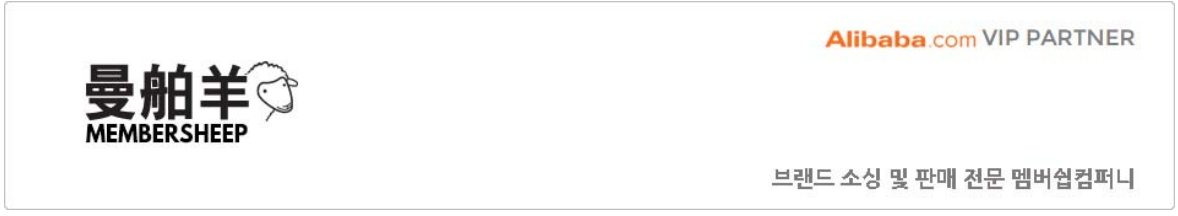
- 멤버쉽은 **패션 브랜드가 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B2B 플랫폼임**. 2014년 창업 이후 한국의 스베누(Sbenu), 시위(Siwy) 뿐만 아니라 칼하트,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글로벌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 풀을 갖춤

-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해 50개 사를 VIP 파트너로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멤버쉽임

- 멤버쉽의 김진성 CEO에 따르면 브랜드가 멤버쉽에 입점하게 되면 "멤버쉽이 제품 온라인 등록에서 소비자 상담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브랜드를 대신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

- 작년 9월 멤버쉽은 대만, 한국, 동남아시아, 중국 시장에 50개 브랜드 런칭을 도왔으며 170% 성장을 이끌어냄

- 한류가 지속되는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브랜드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멤버쉽은 지금까지 쌓은 성공을 기반으로 그런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도울 것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오픈트레이드(OpenTrade)

- 오**픈트레이드는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투자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임**.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스타트업 기업은 이자를 지불할 필요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음

- 오픈트레이드의 고용기 대표는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소통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며, 외국에 있는 더 큰 투자 풀에 접근하고자 하면 더더욱 어렵다**"면서 "오픈트레이드는 스타트업과 잠재적 투자자들 사이에 개방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어 아직 초기 단계인 사업에 투자를 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신뢰를 쌓게 해준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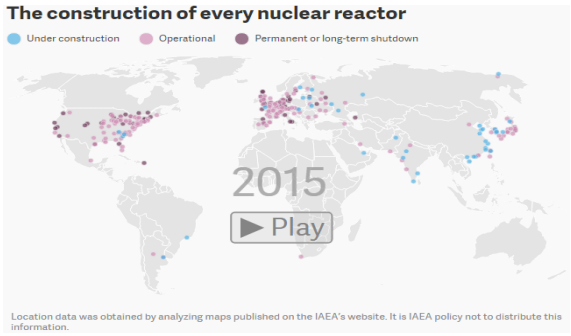
- 오픈트레이드는 첫 번째로 생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SK 텔레콤이나 프라이머(Primer) 등 한국 기관투자자를 비롯, 21,223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현재는 한국투자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외국인 투자에도 제한이 없음. 오픈트레이드는 또 막 창업에 뛰어든 새내기 기업인들을 경험이 풍부한 멘토와 연결해주기도 함

- 멤버쉽과 오픈트레이드가 한국 스타트업 기업과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해외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들의 성공에는 한류 이상의 것이 필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탁월한 기업 운영이 필요함.** 그렇지만 포츈 지가 다시 스타트업의 실패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면 그 반대의 사례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큰 한국 시장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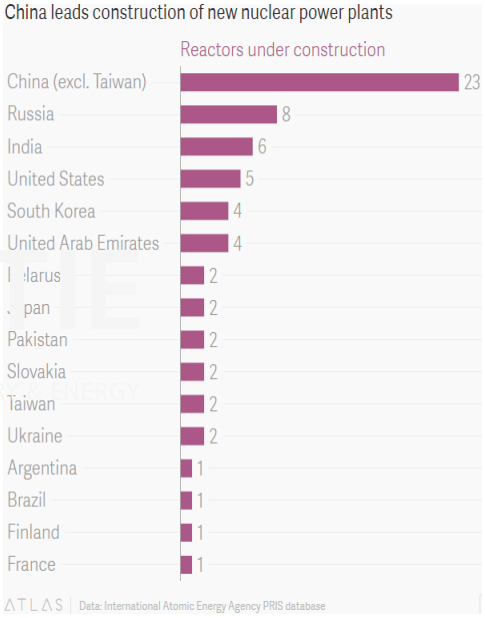
2. New Nuclear Reactors Are Being Built a Lot More Like Cars (Quartz)



- At its birth, nuclear power was a closely guarded national enterprise, only accessible to the most prosperous nations. But over the last 50 years it has evolved into **a robust international market with a global supply chain.** Not only are more countries starting or considering new nuclear plants, a great many more countries are contributing to their construction.

- According to data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66 nuclear reactors are under construction** around the world. Dozens more are in various stages of planning.

- **The vast majority of new reactors are being built in China**, which has invested in nuclear power in a way not seen since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first built out their capacity in the 1960's and 70's. China's 2015 Five Year Plan calls for 40 reactors to be built by 2020 and as many as ten more are planned for every year thereafter. **15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so building reactors.**



- The Chinese sprint toward nuclear power is along a path toward **becoming a major exporter of nuclear technology and expertise.** In addition to adopting western designs, China also has its own reactor designs. At the same time China has upgraded its capacity to produce pressure vessels, turbines and other heavy manufacturing components—all of which it is expected to begin exporting.

- This sort of **globalized manufacturing** is nothing new: cars, airplanes and most other complicated machines are built in this way. However, it is new for reactors, which must be **constructed on-site** and rely on **highly specialized parts.** Those parts must be manufactured to **tolerances well beyond what is required in other industries.** In some cases the equipment needed to creating them must be **purpose-built.**

- According to another NEI list, **the construction of a new reactor** may require a total of:

  * 500 to 3,000 nuclear grade valves
  * 125 to 250 pumps
  * 44 miles of piping
  * 300 miles of electric wiring
  * 90,000 electrical compon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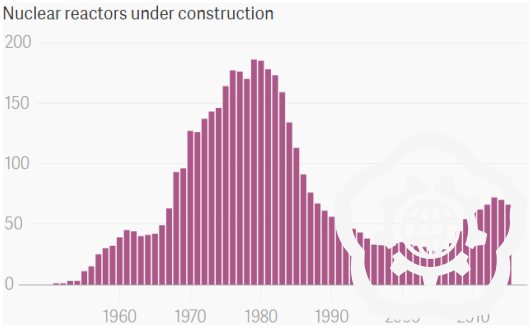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

김신희 / 홍보담당관 / 2016-01-27 14:08:29

- According to Greg Kaser, who analyzes supply chains for the WNA, **the market for nuclear components has been driven by US-based reactor companies,** namely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The US can't produce everything that's required for a nuclear reactor anymore, so they have to go international," Kaser told Quartz.

- Reactors based on Westinghouse's AP1000 design are under construction in both the US and China. The parts for these reactors are sourced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come from European companies that were originally created to supply domestic nuclear programs, but have since become important exporters. This trade in nuclear components is difficult to measure. Despite the specific qualifications of a nuclear-grade valve, it is still a valve and doesn't necessarily show up in trade statistics as anything more.

- A great deal of trade is also in expertise. **Engineers from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equently consult on (or lead) nuclear projects around the world.** A 2014 WNA report (paywall) estimates that the total value of investments in new nuclear facilities through 2030 will be $1.2 trillion.



- But this **nuclear globalization** has not been greeted with enthusiasm everywhere. The 2011 nuclear **contamination disaster at Fukushima**, Japan, briefly stalled development of some projects and prompted Ger[illegible] to begin shutting down all of its reactors. A decision by th[illegible] **to allow a Chinese company to develop new nuclear reactors in England** has led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and-wringing over the security implications.

- Others worry about about safety issues resulting from **companies faking the certifications required for selling reactor components.** In 2013, **two South Korean nuclear reactors** were shut down w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y had installed **cables with counterfeit nuclear certifications.** This year the IAEA will update a procurement guide for plant operators that was published in 1996. The new version will include a chapter specifically addressing counterfeit components.

- For the moment, it's unlikely any of these concerns will be enough to slow the resurgent growth of the global nuclear industry. Though big nuclear companies often speak of localizing the supply chain—and keeping those jobs in their home country—**international competition can drive down the price of building a reactor.**

- In fact, the **supply chain is likely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future.** New reactors being designed today are both smaller and more modular, and plans call for large sections of them to be assembled in factories and shipped to the site. If it sounds a lot like the assembly line at a automobile plant, that's because it is. But of course, one small oversight or production flaw could make a much greater difference.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

김신희 / 홍보담당관 / 2016-01-27 14:08:29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16. 1.27(수) 해외문화홍보원

【북한】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검토 및 5자회담 제안에 중국의 중재 필요성 대두

<CRI> 韓, 중국 및 러시아 반대 불구하고 사드 도입 가능성: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됐고, 한국은 강력 대응 위해 사드 배치 도입 검토할 것. 중국은 정세 안정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것

<대공망 기고> 흔들림 없이 6자회담 틀 견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 제의했지만, 설령 북한을 제외한 5자가 합의를 도출한다 해도 북한의 반발만 일으킬 것. 6자회담 체제는 쉽게 바뀔 수 없는 것. 한국과 중국은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강구해야 할 것

<대공보 논평> 북핵 실험이 외교/정치구조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의 목적은 중국 견제. 북한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막는 카드가 될 수도.

<Blmg> 케리 미 국무, 중국에 대북 제재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중국은 북한정권의 불안으로 이어지거나 북중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는 지지하지 않을 것. 북한은 제재가 통해지 않는 것입이, 이미 입증됐다는 지적도.

【경제】

부양책 효과가 시들해지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여전 소비 진작 난망

<WSJ> 4분기 한국경제 성장 둔화: 한국경제는 지난해 3분기 부양책에 힘입은 성장 모멘텀을 잃고 4분기 급격히 둔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 가중될 듯. **<FT>**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커 지극히 외부 중심적" 분석, "중국 및 신흥시장 수요 둔화로 올해도 한국의 수출 계속 고전할 것" 전망 소개 **<FT>** "성장 급등 이후 어느 정도의 모멘텀 약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정책적 뒷받침 및 완만한 수출 회복으로 향후 성장 개선될 것" vs.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성장 부진이 계속 한국의 성장에 걸림돌 될 것" **<Blmg>** 대규모 소매업 할인 행사 등이 지난해 연말 끝나면서 올해 민간소비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가계 부채, 고령화 같은 인구통계학적 문제도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타】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강연 "한국으로부터 압력과 회유의 연속"

<교도통신> 중국 세관총서 2015년 대북 원유 수출 "제로" 발표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세부 내용

□ 북한

o 韓, 중국 및 러시아 반대 불구하고 사드 도입 가능성 (中 CRI 1.25)

- 최근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통해 국가안보 및 이익을 바탕으로 사드 도입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실제로도 한국은 향후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드 도입 가능성 농후

- 첫째,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악화. 한국인의 대북 적대감도 고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북핵 실험에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사드 배치 검토는 시기적으로 적절. 둘째, 북핵에 따른 한반도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도로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미국은 이를 기회로 한반도 사드 배치 촉구할 것

- 셋째, 러시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시리아 내전 등의 현안에 비해 한반도 사드 배치는 긴급한 문제가 아닌 만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 가능성 희박. 넷째, 한국의 미중 간 "줄타기" 책략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

- 중국에게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적 중재 통한 각 측 간 대화 및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 뿐

□ 경제

o 4분기 한국경제 성장 둔화

(South Korea's Economy Slows in 4Q ; 美 MS 인터넷 1.25 Kwanwoo Jun 서울발)

-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는 직전 분기 부양책을 통해 추진된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을 잃고 급격히 둔화. 한국은행에 추가 금리 인하 압력 가중될 것

- 5년 만에 최고 성장을 기록한 2015년 3분기 대비 이 같은 성장 둔화는, 6년 만에 가장 가파른 수출 하락과 맞물려, 앞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힘을 잃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

-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같은 수출 하락의 원인으로 중국경기 둔화, 유가 하락,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적. 시장 분석가들은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경우, 수출 부진은 계속해서 한국의 성장을 크게 짓누를 것으로 관측

- 그러나 한은은 높은 가계 부채,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시장 자본 이탈 가능성 등을 우려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

- **<FT 1.26, South Korea Export Growth Slows to Trickle as China Demand Wanes>** 지난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고작 0.4%,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전망을 더 암울하게 관측, 중국경제 둔화 및 저유가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여파 부각. HSBC의 조셉 인칼캐테라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경제가 지극히 외부 중심적" 지적

-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이달 FT에, 중국이 2016년 성장 목표인 6.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노무라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낙관적 전망일 것 관측, 즉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하락할 것을 의미. 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및 신흥시장 수요가 계속 둔화되면서, 수출이 올해도 고전할 것" 전망. 그는 또, 소비 회복세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FT 1.26, 별도 분석 South Korea: Neither One Thing nor the Other>** 크리스탄 탄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2015년 3분기 강력한 반등 이후 4분기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모멘텀 잃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듯하지만, 완만한 수출 회복, 그리고 통화 및 재정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성장률이 다시 오를 것", "중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

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수출 진작에 도움이 될 것"
- 그러나 ANZ 애널리스트들은 비관적.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6.4%, 미국경제 성장률은 약 2.0%가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주요국 경제 둔화는 2016년 계속 한국경제를 압박할 것",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저유가도 한국의 무역에 계속 걸림돌이 될 것"

- **<Bloomberg 1.26, Korea's Growth Falls From Five-Year High as Property Boom Cools>** 지난 4분기 성장률은 5년래 최고치를 정점으로 후퇴. 2015년 앞서 경제를 뒷받침한 부동산 거래 급증 현상 흐지부지

- 중국경제 둔화 및 글로벌 불확실성이 수출업계에 타격이 되는 상황에서, 성장률 부진은 성장을 위해 내수에 의존하며 정책입안자들이 당면한 난관을 부각시키는 것. 박상현 HI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경제는 소비 및 부동산 시장을 통한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으로 뒷받침됐고, 수출은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

- 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세금 인하, 소매업 대규모 할인 행사 같은 정부 조치들이 12월 끝나 2016년 민간소비는 약해질 수 있을 것. 높은 가계 부채, 고령화 같은 구조적, 인구통계학적 문제도 소비자 지출에 영향 미치는 요소

□ 기타

o 가토 전 지국장 강연 "한국으로부터 압력과 회유의 연속"

(日 산케이 조간 1.27 2면 도쿄발)

- 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강연.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돼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에 대해 "한국 측의 압력과 회유의 연속이었으며,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회상

- 가토 전 지국장은 청와대가 책임을 면저히 추궁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산케이신문에 유감 표명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

*교도통신 유사 보도

o 중국 세관총서 2015년 대북 원유 수출 "제로" 발표

(日 교도통신 21:35 베이징발)

-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제로. 통계상 제로는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 북한은 원유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원유 부족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어, 중국이 통계에 기재하지 않고 북한에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견해 지배적

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T: Financial Times
WSJ: The Wall Street Journal
BBG: Bloomberg